공공기관 전북 추가이전 강력 촉구

투자공사·7대 공제회·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 등
김관영 도지사, 여야 전북국회의원들과 결의 성명

전북도와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1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공기관 전북 추가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 이전설의 기저에는 중앙 중심의 편협한 사고와 시대착오적인 편견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이전설이 사실이 아니고 정부의 균형발전의 의지가 진실하다면 이제 정부가 당당히 응답할 차례다"며 "도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며 전북의 특성에 맞은 공공기관 이전을 결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길 염원하는 도민의 희망을 담아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농생명산업수도 실현을 위한 농협중앙회, 말산업 특구 내실화를 위한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북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우선 배치는 국토 불균형 해소와 전북도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며 "이들 기관의 전북 배치가 실현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점과제이자 전북 지역발전의 중대 현안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의 뜻을 더욱 모으고 강력한 의지를 펼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전북 추가이전을 위한 전북도·전북국회의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尹 정부 강제동원 대책 철회해야"

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대표발의 촉구 결의안 가결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수봉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 기업의 배상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2018년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문 어디에도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며,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 것이다.

윤수봉 의원은 "강제동원 대책에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가 빠져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즉 개인이 존엄을 회복할 권리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개인이 존엄을 회복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7일 전주시의회 회의실에서 후백제에 관련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후백제 특별법 통과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는?

전주시의회 회의실서 정책 포럼 열려
"왕궁터 조속 발굴·전주 고도 지정 추진을"

'후백제 특별법 통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포럼이 전주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지난 17일 전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채영병(효자2·3·4동), 전북과미래포럼, 후백제시민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백제에 관련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난 1월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지정된 이 후 후백제 왕도 전주의 의미 살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날 김성주 국회의원은 "후백제는 과도기적 국가가 아닌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갖춘 당대의 주역"이라며 "후백제 왕궁터의 조속한 발굴, 전주의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화섭 후백제 학회장은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후백제 홍보관을 조성하고 기념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송영진·채영병 의원은 "후백제 역사 정비를 위한 시간이었다. 후백제 도읍이자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주의 위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4·5 전주을 재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임정엽·김경민·김호서·강성희·김광종·안해욱 등 6명

다음달 5일 재보선 선거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전주을 재선거구의 대진표가 결정됐다.

지난 17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날인 16일 김경민(국민의힘), 강성희(진보당), 김광종(무소속), 김호서(무소속), 임정엽(무소속) 등 5명의 후보에 이어 이날 안해욱 후보(무소속)가 등록해 모두 6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후보는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먼저, 임정엽 후보는 "로컬푸드를 만든 강력한 추진력으로 전주를 교육과 건강, 일자리 중심지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며 "답답한 전주의 대변화를 이끄는 소용돌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민 후보는 "1년 2개월짜리 단기간 자리지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주가 과거 6대 도시로 불릴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현재는 가난한 도시로 전락했다. 앞으로 전주를 디지털전주로 전환해 청년일자리 10만개에 이르는 강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후보는 "전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주의 자존심을 세우고, 대출 금리를 법적으로 낮춰 서민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종 후보는 "전주는 조선왕조를 배출한 도시"라면서 "전주를 다시 부응시켜 300만 인구가 육박하는 도시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서 후보는 "이번 재선거는 전임자의 비리로 치러지는 불행한 재선거"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된다. 1년 이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17일 등록을 마친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최근 친일 행적의) 윤석열 대통령과 (줄리 의혹의) 김건희 여사의 실정을 지역 주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심판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후보 기호 추첨도 마무리돼 기호 2번 김경민, 기호 4번 강성희, 기호 5번 임정엽, 기호 6번 김광종, 기호 7번 안해욱, 기호 8번 김호서 순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오는 선거운동개시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표심 찾기에 나서게 된다. /특별취재반

김동구 도의원, 기업애로해소 자문단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전북도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을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에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이 설치되면 도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기술상 애로점 등에 대해 기업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처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단은 경제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나 임원, 기업경제와 규제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30명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군산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도의회 인사청문회, 의료분야 실무능력에 높이 평가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1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연세의료원 외과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학과 교수로 근무한 점과 경기도의료원장 및 대한응급의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약 40여년간 다양한 의료분야의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과 운영관리 효율성 도모를 통해 의료원 운영 체질 개선에 힘썼던 등을 얘기하며 군산의료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조준필 원장 후보자는 최종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개선할 점들을 보완하여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으며, 주어진 임기 동안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군산의료원을 신뢰받는 공공의료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병철 위원장은 "군산의료원은 도민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후보자께서 군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될 경우,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독립채산제 운영,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최신 의료장비 도입,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 방안, 타 지역 출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요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김재훈 기자

"효자공원묘지, 웰니스 휴양지 숲으로 조성할 것"

김호서 전주을 후보,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다목적구장 등 갖춘 공원으로"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김호서 무소속 후보가 전주의 마지막 중심부인 효자공원묘지를 치유와 힐링의 공간인 웰니스 휴양지 숲으로의 조성을 약속했다.

지난 17일 김호서 후보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죽음으로만 묘사됐던 효자공원묘지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생명 치유와 힐링을 위한 장소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원묘지를 최소한의 공간만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70%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그 자리를 시민들에게 전주의 백년을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공원묘지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 △시민정원 △잔디무대광장 △다목적구장 △어린이놀이터 △체험시설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도심 속 친환경 녹색·힐링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

먼저 공원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로 묶인 개인 사유자에 대한 매입을 시작으로 무연고 묘 등을 포함한 봉분들을 화장을 통한 봉안당, 자연장, 또는 이장을 유도해 본격적인 도시공원화 작업에 착수하고 그 부지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줄 수 있는 △건강숲 △스파 △명상 등의 시설인 시민정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소년과 직장인, 동호회 등을 위해 소규모 행사와 공연이 열릴 수 있는 잔디무대광장 조성과 함께 인공폭포와 바닥분수 등을 설치해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피크닉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원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유아 체험숲 △숲속 책 놀이터 등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것을 강조했다.

김호서 후보는 "효자공원묘지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성장을 발목 잡았던 지역이었다"며 "아무도 찾지 않던 그 자리에 인공폭포, 바닥분수 등 친수 시설과 다양한 어린이 체험 시설들을 만들어 시민들이 언제든 와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갈등 조정 나선다

도의회, 특위 구성 간담회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안군 김정기(부안)·김슬지(비례) 의원, 군산시 강태창(군산1)·김동구(군산2)·박정희(군산3)·문승우(군산4) 의원, 김제시 나인권(김제1)·황영석(김제2)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할 새만금 개발 사업이 새만금 지구의 관할권을 둘러싼 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 간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들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앞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시군 간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며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및 활동 방향에 대해 의논했다.

사전 간담회를 주최한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권역 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묶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북 발전의 필수적 요소"라며 "도의회가 현재의 갈등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과 그 효과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